

빈곤의 포비아(phobia), 순치되는 혁명과 깡패/여공의 젠더 분할

공임순*

「차례」

1. 5·16과 깡패소탕의 (연)극화된 퍼포먼스
2. 깡패의 시계열화와 피단속자/낭비의 도상학
3. '내뺨'의 젠더 정치와 여공 신화의 창출
4. 순치되는 혁명, 한국사회에서 깡패와 여공은 무엇이었나-결론을 대신하며

나쁜 아니라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순종적으로 일했다. 그런데 당시에 박정희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주 '근면을 강조했다. 공장 새마을 운동에서는 빈곤을 태만과 무지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근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순애, 『열세살 여공의 삶 한 여성노동자의 자기역사쓰기』-

〈국문초록〉

이 논문은 1장에서 5·16 직후에 벌어진 깡패소탕의 퍼포먼스에 주목했다. 200여 명의 깡패들이 서울 시내를 일주한 이 깡패소탕의 퍼포먼스는 5·16 군정의 통치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5·16 군정에 의한 이 깡패소탕의 퍼포먼스는 4·19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이승만정권의

* 서강대학교 연구원

정치깡패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분노를 국민 일반으로 되돌리는 피단속자의 형상을 낳았다. 2장은 이러한 피단속자=국민이라는 등식이 갖는 전도된 관점과 인식을 문제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일상적인 신체 통치술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지를 되짚었다. 여기서 5·16 군정에 의해 체포·검거된 깡패들이 오지의 도로건설현장에서 시연한 근로/생산주체가 또한 중요하게 부각된다. 왜냐하면 이 깡패들이 ‘전시’하고 있는 근로/생산주체야말로 5·16 군정을 잇는 박정희 체제의 향후 국민화의 방향성을 틀지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내핍하는 근로/생산주체’라는 젠더화의 함의를 띤 한국사회의 여공 신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냥 열심히 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내핍이라는 젠더화의 자질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근로자상을 한국사회에 정초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이 유례없는 여공 신화는 월러스틴(Wallerstein)이 말한 세계 체제 내 하위 노동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전태일의 분신이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4장에서는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변모하는 사회상을 깡패와 여공의 두 문제적인 신체를 통해서 살펴본 데 따른 의의를 설명한 후, 결론을 대신하여 도대체 한국사회에서 깡패와 여공은 무엇이었으며, 현재의 한국사회는 이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되묻고자 했다.

핵심어: 4·19와 5·16, 깡패소탕, 여공 신화, 여론조사, 피단속자=국민, 내핍, 근로/생산주체, 한일협정, 청년학생, 전태일, 함석헌, 박정희, 빈곤의 포피아, 국민화의 문법

1. 5·16과 강패소탕의 (연)극화된 퍼포먼스



『동아일보』의 「강패두목들의 속죄행진」

원편의 사진은 5·16이 발발한 직후, 강패들의 거리행진을 담은 사진이다. 이 사진은 『동아일보』의 1961년 5월 23일자 사회면의 「명패를 붙이고 속죄 행진하는 강패 두목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도 하루씩의 시차를 보이긴 하지만, 이 사진을 사회면의 중요 기사로 일제히 내보내기는 마찬가지였다.¹⁾ 그만큼 이 사진에 담긴 강패들의 열을 지은 거리행진이 갖는 시각적 효과

는 컸다 할 것이다. 더불어 이 강패들의 가두행렬을 인도하는 무장한 군인의 모습은 5·16 직후의 상황을 예증하는 바로미터로 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한다.

강패들의 거리행진과 관련하여 강준만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그래서 눈길을 끈다. 그는 군인들을 지지하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5·16주체 세력은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다. 무슨 화끈한 이벤트가 없을까? 5·16주체 세력이 보여준 이벤트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했던 것이 바로 5월 21일 강패들의 거리행진”²⁾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의 말처럼 이 화끈한 이벤트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사진의 전면에 나부끼는 “나는 강패입니

- 1) 강패들의 거리행진은 타이틀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1961년 5월 22일의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여 5월 23일 『동아일보』의 사회면을 일제히 장식했다. 위에서 인용한 사진은 「명패를 붙이고 속죄 행진하는 강패 두목들」이라는 『동아일보』의 1961년 5월 23일자 사회면에 실린 사진이다.
- 2)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6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2004, 14쪽.

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는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와 “우리의 젊은 몸과 마음을 국가에 바치겠습니다.”³⁾라는 플래카드의 뒤따르는 ‘전시’ 속에서, 5·16 직후 군부세력에 대한 인상을 역으로 국민들에게 강렬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약 200여 명의 깡패들이 덕수궁을 출발하여 종로와 남대문 등 서울의 주요 시내를 일주한 이 화끈한 이벤트의 유래와 기원은 식민지 말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 말기 일제의 전시 총동원은 소위 이 깡패들의 거리행진을 일찍이 ‘연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⁴⁾ 5·16 군부세력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벤치마킹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만주국의 경험을 국가 재건의 모태로 삼았던 5·16 군부세력이 그 의도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재현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강렬한 인상의 극적 이벤트는 5·17 직후 전두환의 군부세력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재연되는 뿌리 깊은 식민성의 흔적을 드러내게 된다.

200여 명의 깡패들이 서울 시내를 돌면서 집단 참회와 속죄를 벌인 이 희귀한 풍경이 불러일으킨 반향은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의 논평을 낳았다. “혁명 후 전격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혁으로 청신한 바람이 부는 감이 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깡패들의 속죄행진이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누구나 오래 채했던 것이 썩 내려가는 기분”⁵⁾이라는 언급이 바로 그것이

3) 플래카드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한 『“깡패생활 청산하겠다” 이정재(李丁載) 선두로 2백 명이 시가행렬』의 『조선일보』, 1961년 5월 22일자를 참조했다.

4) 일제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총동원은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단의 조직과 동원에 힘을 기울이게 했다. 청년단의 전국적 조직화는 일제에 의한 전쟁의 확대와 심화 속에 더욱 본격화되었다. 이 청년단의 일부로 김두한, 『피로 물들인 건국전야-김두한 회고기』, 연우출판사, 1963은 자신과 같은 이른바 주먹들을 모아 ‘경성특별지원청년단(대)’을 결성하여 분열식(分列式) 및 시가행진을 했음을 자랑스럽게 회고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진술의 타당성 여부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적어도 ‘경성특별지원청년단’이 ‘반도의용정신대’로 이름을 바꾸어 지속되었다는 그의 언급은 『매일신보』, 1944년 6월 13일자 ‘금속회수에 이체-반도의용정신대의 놀라운 활동’에서 확인된다.

5)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1년 5월 24일자.

다. 이 신문기사의 논평은 강패들의 집단적 참회행렬을 바라보는 일반의 부정적인 시선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었다. 강패에 대한 일반의 시선이 이처럼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데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강패가 형성되어온 사회역사적인 내력과 무관하지 않다. 월남한 우익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반공청년단체들은 이승만정권의 비호 아래 반공을 명분으로 각종 이권과 특혜에 손을 대며 이 강패들의 산파역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강패조직과 이른바 반공청년단체들의 태생적 유착과 공모는 이권과 특혜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이승만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사설 전위부대이자 행동부대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강패가 지닌 이러한 특수한 발생사는 “좀 험악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 젊은이는 일단 반공청년, 반공사상이 투철하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먼 강패 같다는 뜻”⁶⁾의 『서글픈 얼룩들-4·19 부산물 유행어 4년사』라는 기사의 소재거리로 등장시킬 만큼, 강패와 반공청년을 동일시하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반공청년과 결부된 이러한 강패들의 존재는 1960년대의 신어로 등재된 이른바 ‘정치’강패들의 존재로 인해 더욱 문제시되었다. 이 정치강패들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일변도를 설명해주는 『정치』의 남용으로 정치교수, 정치학생, 정치방학”⁷⁾ 등과 같이 1960년대의 신어로 당당하게 등재되었는데, 이 ‘정치’강패의 존재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57년 5월 25일 야당이 주최한 장충단집회방해사건을 통해서였다. 백주 대낮에 야당 인사의 마이크를 빼앗고 집회장을 이수라장으로 만든 이 장충단집회방해사건은 “누구의 선을 잡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고는 그러한 권력이나 힘이 없는 사람은 개, 돼지 같이 멸시”하고 “권력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의 위세를 빌어서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약소국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적 강패”⁸⁾에 대

6) 『서글픈 얼룩들-4.19 부산물 유행어 4년사』, 『경향신문』, 1964년 4월 18일자.

7) 『60년대 신어』, 『동아일보』, 1969년 12월 20일자.

8) 황산덕, 『강패시대』, 『사상계』, 1958년 6월, 108쪽.

한 사회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적 깡패”뿐만 아니라 정치 깡패를 포함한 ‘깡패’ 일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며 이 사건의 주동자로 활약했던 유지광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나라의 토착어처럼”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깡패가 “영어의 갱(gang·강도)”과 “목적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에 붙는 패”가 합성된 개념임을 밝히며, “「강도 같은 놈들」을 구두담이 소년들이 깡패”라고 부른 데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57년 장춘단사건 이후 신문들이 「깡패가 장춘단집회를 방해했다」고 보도”함으로써 깡패는 그에 의하면 “일반 통용어”로 정착되어졌던 것이다. “미국말과 한국말의 혼혈어”이자 “사생아”⁹⁾인 이 깡패라는 말은 “의로운 고대학우들이 경찰의 사수인 깡패 놈들의 벽돌장과 곤봉, 갈고리에 활취고 노곤히 얻어맞”¹⁰⁾아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한 정치깡패들의 존재를 세간에 깊숙이 새겨놓게 된다.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진 이들의 폭력은 정치깡패를 통해서 겨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온 이승만정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억눌린 불만과 분노를 폭발시키며 정치깡패에 대한 일반의 적대감을 고조시켰던 것이다. 이는 4·19를 맞아 정치깡패에 대한 엄정한 색출과 검거 및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이게 했다.

이러한 정치깡패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무법과 무질서는 이들의 사적인 폭력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존재가 상징하는 한국사회의 마비된 국가 작동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과 비판을 함축하고 있었다. 즉 연합국에 의해 주어진 해방과 미소에 의한 남북분단 및 동족 간의 6·25전쟁을 거친 한국사회는 “줄만 대고 있으면 여간한 불법 행위도 다 무사해지는 것을 보자 뚜렷한 자기의식을 갖지 못한 시대적 고아는 모두 이 편리한 방법을 따르게 되었고 이리하여 관청에, 직장에, 그리고 학원에까지 「줄을 댄 깡패」가 범람하는 온상이 되었으며 그 중의 극히 일부가 정치깡패라는

9) 유지광, 『대명』, 동서문화사, 1974, 353쪽.

10) 이돈영, 「그 거창한 분기여」, 『사상계』, 1960년 6월, 290쪽.

“폭력 수단을 쓰면서 나타난”¹¹⁾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후진적인 정치풍토가 만들어낸 이러한 정치강패의 존재는 ‘강패정치’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말로서 1960년대를 풍미했다.

한국사회의 이른바 총체적인 문제‘상’을 드러내는 이 정치강패의 존재는 강패정치와 함께 강패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한국사회에 또한 선사했다. 한국사회가 보인 이 정치강패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은 강패가 등장하지 않는 대중소설이 드물 정도로 그 상한가를 쳤다. 그 중의 하나가 소설 속 등장인물의 신탁통치 지지 발언이 문제가 되어 반공법 저촉에 걸려 부득이 연재가 중단된 박계주의 『여수』일 것이다. 여기서 소설 속 남자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한국사회를 평한다. “독일만치 건설해놓고 부흥시켜 놓아 국민으로 하여금 잘 살게 하면서 그러한 장난질을 한 대도 또 모르겠다. 이걸 그렇지 못하면서도 강패정치만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한심한 노릇이 아니라 통곡할 노릇”¹²⁾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같은 분단국가인 서독과 비교해 한국사회가 지닌 낙후된 정치풍토의 비판에 다름 아니었으며, ‘강패정치’를 정치강패 및 강패공화국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되비추는 거울상으로 삼게 했음을 위 사례는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¹³⁾

이 맥락에서 5·16 직후 군부세력이 왜 그토록 강패소탕에 공을 들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 강패들의 집단적인 참회행렬은 5·16 직후에 군부세력이 전광석화와도 같이 해치운 강패소탕의 일환에서 행해진 일회적인 퍼포먼스였기 때문이다. 5·16 직후에 군정은 강패소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며, 매일 같이 신문지상을 타고 전해지

11) 황산덕, 『한국강패의 사회심리적 분석』, 『사상계』, 1960년 3월, 156쪽.

12) 박계주, 『여수』, 『동아일보』, 1961년 11월 17일자.

13) 강패를 주제로 한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단연 1960년은 수위를 차지한다. 1960년 937건, 1961년 710건, 1962년 191건, 1963년 206건, 1964년 180건, 1965년 129건이 그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1964-65년의 한일협정의 국면에서 다시 불거진 강패 논란은 1960년대 내내 한국사회에서 강패가 문제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3장에서 후술할 예정이다.

는 「깡패 53명 검거 18일 하루 동안」이나 「깡패 칠백 명 검거 전국에서」와 같은 뉴스들로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했다. 깡패들의 집단적인 참회행렬을 비롯한 깡패소탕의 국가적 이벤트는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을 누르고 제 3공화국을 출범시키기 전까지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곤 했다. 이는 깡패소탕이 5·16 군정과 맺는 불가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5·16 군정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되는 이유의 일단이었다. 이를테면 “혁명정부가 앉은 지 삼주일 밖에 못 되는데 재빠르게 일반 국민의 여론”¹⁴⁾을 수렴하여 발표한 1961년 6월 1일과 3일 사이에 행해진 첫 번째 여론조사가 이미 한 방증일 것이다.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정부 시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국정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는 취지하에서 시행된 이 첫 번째 여론조사는 “시일이 너무 짧고 조사대상자의 수효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도시에 국한”¹⁵⁾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5·16 군정의 초기 활동과 성과를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여태까지의 정부시책을 잘”했다고 보는 것이 75%인 데 반해, 깡패소탕은 “댄스범 처벌, 교통정리, 정당사회단체 해산, 신문통신 정비, 국회지방의회 해체”¹⁶⁾ 등의 다른 항목들을 압도하며 무려 96.2%에 이르는 지지를 이끌어냈다. 썩 잘했다(88%)와 대체로 잘했다(8.2%)를 합친 깡패소탕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은 5·16 직후 군정이 다른 무엇보다 깡패소탕을 통해서 그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⁷⁾

14) 「여론조사와 정부시책」, 『경향신문』, 1961년 6월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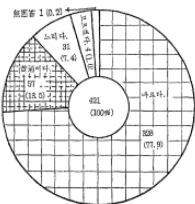
15)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시민의 협력」, 『경향신문』, 1961년 6월 1일자.

16) 「정부시책지지가 압도적」, 『동아일보』, 1961년 6월 1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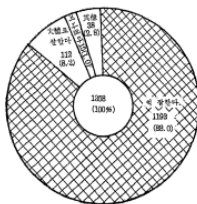
17) 아래의 도형은 군정 종식을 앞두고 5·16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1963년의 보고서 중 일부이다. 아래의 세 도형은 5·16 직후 군정이 행한 조치들 중 일반의 지지가 높게 나왔던 것만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들인데, 두 번째 “깡패단속 및 처리”로 묶인 깡패소탕이 여타의 다른 두 항목을 단연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3년 군정 종식과 민정 이양을 앞두고 군정 2년의 성과를 압축한 1963년 『최고회의보』의 『혁명치적의 총결산』에서도 이는 재확인된다. “치안행정업적을 살펴보면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첫째는 사회악 제거로서 폭력불량배의 근절로 사회의 명랑화를 기한 바 총 87487명을 검거 그 중 609명을 검찰에 송치, 604명을 타 기관에 이첩, 18055명을 즉심회부, 3246명을 국토건설사업장에 취역하였으며 절도범 검거율이 5·16 전의 46%에서 55%로 향상되었고 강력범 검거율도 5·16 전 74%에서 90%”¹⁸⁾로 높아졌음을 자부하며, 강패소탕을 단지 5·16 직후에만 국한되지 않는 2년여의 군정 기간을 통틀어 가장 성공적인 업적과 성과로 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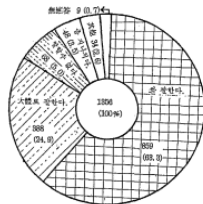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동반하며 강패소탕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자부한 5·16 군정의 통치 이면에는 그러나 “그래 사람들, 설사 내가 강패라고 한들-사람을 종로네거리에서 조리돌림을 하다니 인권유린도 유분수지, 4·19 이후 엄정한 법에 의하여 8개월을 살고 석방된 나를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하고”¹⁹⁾라며 분통을 터뜨린 이정재의 항변이 가로놓여 있었다. 대표적인 정치강패의 수괴로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만 이정재의 이 항변이 한국사회에 가닿을 곳은 실상 아무데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자진 참회라는 집단적 거리행진이 실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아니 자신은 이 강제된 연극 무대의 일개 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민원서류 처리



강패처리 및 단속



교통법규 위반자

18) 김용순, 『혁명치적의 총결산: 내무위원회 소관』, 『최고회의보』, 1963년 12월, 24쪽.

19) 유지광, 앞의 책, 335~336쪽.

“굴비두름처럼 쪼여” “『나는 강패입니다』 라는 뜻을 듣고 시청 앞 광장을 행진”한 후 이 강패들은 “덕수궁 안으로 들어가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맞았고 다시 『국토건설단』이 되어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 역시 죽을 고생”²⁰⁾을 했다. 이러한 강패소탕의 화려한 퍼포먼스의 이면에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목소리와 신체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일반의 뜨거운 열의와 요구를 대행했기에 그래서 96.2%라는 높은 지지도를 이끌어냈기에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고 부정하지 않았던 강패소탕은 이처럼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숨 가쁜 변화와 굴절 및 단층들을 매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강패소탕과 관련한 또 다른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강패소탕의 그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분석과 고찰은 강패소탕을 즈음한 한국사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5·16 군정은 4·19의 정치 강패에 대한 사회변혁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전유하고 치환·굴절해 갔는가이다. 강패소탕에 얽힌 이러한 한국사회의 달라지는 사회상은 2장과 3장에서 논의할 ‘강패와 여공’의 역상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단면을 드러낼 터였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의 내용은 이것이다.

2. 강패의 시계열화와 피단속자/낭비의 도상학

5·16 직후 군정이 실시한 첫 번째 여론조사는 정부의 시책 일반을 필두로 강패처벌 및 댄스범의 엄단 처벌 그리고 정당과 사회단체의 해체와 교통정리, 신문과 통신에 관한 정비 및 국회와 지방의회 해산에 관한 건이 설문문의 주요항목을 이루고 있었다. 그 외 부정축재 처리와 농어촌고리채 정리에 관한 요강과 대책은 참고문항으로 제시되었다. 이 주요항목과 참고문항은 5·16 직후에 군정이 실시한 정책들을 토대로 하여 일정한

20) 『관철동 시대 70년대 한국 문단 풍속화』, 『동아일보』, 1986년 8월 30일자.

범주화를 거친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 일정한 카테고리 묶여 일반에게 제시된 여론조사의 항목들 중에서, 깡패처벌과 댄스 범의 엄단 처벌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확정짓기가 설문지상으로는 힘든 것들이 많았다. 예컨대 교통정리와 관련하여 보자면, 여론조사결과는 잘했다가 거의 80여 %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지만, 교통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포괄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5·16 직후에 당국은 “혁명 십일 간의 단속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 이 단속 실적에 따르면, 교통관계로 표현된 사고발생과 차량단속은 이 여론조사 항목들 중 교통정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안관계로 표시된 “혁명 이전에 도동·방산동·예관동·노고산동·신길동·영등포본동에 난립되어 모두 철거” 대상이 된 그리고 “혁명 이후 355건이 신축되었으나 모두 철거”된 무허가건물단속은 교통정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583명이 적발(치재 회부 5백 명, 훈계 방면 813명)”된 무허가接客업소와 “531명(치재 519명, 훈계 방면 12명)”의 사창과 “경찰이 적발한 총 7685명(치재 회부 3488명, 훈계 방면 4086명, 기타 111명)”²¹⁾의 통금위반자와 “혁명 이후 보름 동안에 서울시민 3733명이 길을 잘못 들어 적발된 차도 보행자들 중 723명이 치재”²²⁾된 보행위반자들 역시 교통정리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설문 조사자와 그 대상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한없이 유동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5·16 발발과 동시에 공포된 비상계엄령에 의해 16일에는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이상(以上)의 위반자 및 위법행위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극형”에 처한다는 야간통행금지는 17일에 이르러서 세 시간이 단축되어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로 완화되었다지만, 이 통행금지위반으로 인해 10일 동안에만 서울에서 검거된 총 인원이 7685명에 이르고 있었다. 거리 통행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

21) 「혁명 십일 간의 단속 실적」, 『경향신문』, 1961년 5월 27일자.

22) 「보행위반 단속 3700여 명」, 『경향신문』, 1961년 6월 1일자.

동과 흐름을 이 교통정리라는 여론조사 항목에 전부 포괄하지 않는 이상, 여론조사에 반영된 지지도는 5·16 군정에 의해 실제로 실시된 것과 대상자 간의 감각된 차이를 피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이 차이의 틈새에서 법의 효력이 정지되고 비상계엄령과 같은 이른바 아감벤이 말했던 “법률 없는 법률의 힘”²³⁾에 의해 새롭게 출현한 다수의 위반자와 범법자들이 존재했다. 80여 %에 이르는 높은 지지도를 획득한 교통정리의 여론조사 항목에서, 이 위반자와 범법자들은 그야말로 안팎을 넘나드는 다종의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허가건물에 사는 혹은 살았던 빈민들을 비롯하여 당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극형”으로 처해졌던 혹은 처해질 수 있었던 거리의 통행자 및 “혁명 후 서울에서만 1258명이 검거·치재”된 사창의 존재가 그러하다. 더불어 여론조사의 항목에서는 잡히지 않았지만 깡패 못지않게 5·16 직후 군정의 대대적인 소탕과 청산의 일 순위가 된 공산·용공분자들의 존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²⁴⁾

“법의 미비와 기술 부족 등을 이 기회에 보완코자 하며 공산당과 용공분자가 없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 나라를 만들”²⁵⁾기 위해 “22일 현재로 총 2014명을 검거 조사”하여 그 중 “664명의 피검속자를 석방”²⁶⁾했다는 이 공산·용공분자들은 흔히 깡패·강력범과 한 세트가 되어 검거와 단속 실적이 공표되곤 했다. 깡패·강력범과 한 세트가 되어 청산과 소탕의

23) 조르조 아감벤, 김향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78쪽.

24) 5·16 군정은 공산·용공분자들을 명확하게 적시하기보다 혁신계와 남북통일(협상)론에 앞장선 자들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통칭된 공산·용공분자들을 보면, 4·19 당시 교원노조를 비롯해 노동투쟁을 이끈 노조지도부와 『민족일보』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는 결국 5·16 군정에 의해 이 정계 다음으로 임화수·곽영주·최백근과 더불어 1961년 12월 22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공산·용공분자들과 소위 일급 정치깡패들이 그 운명을 같이 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25) 「혁명 축행(遂行)상 필요시 법원 영장 없이 체포·구금」, 『동아일보』, 1961년 5월 18일자.

26) 「치안국장 발표 용공분자 2014명을 검거」, 『경향신문』, 1961년 5월 22일자.

대상이 된 공산·용공분자들은 그럼에도 강패처벌의 항목에도 묶일 수 없는 예외적 존재들이었다. 이 예외적 존재들을 배후로 한 강패소탕은 주지하다시피 5·16 군정에 의한 대대적인 단속 및 검거 실적을 보였고, 이에 따라 96.2%에 이르는 높은 지지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음의 신문기사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 따르는 조그마한 불편 정도는 감수할 줄 아는 미시적인 신체정치의 차원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통치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혁명의 이념보다 혁명의 실천이 중요하다. 크게 말하면 이념과 현실과의 조화가 지난한 때문이다. 이번 혁명은 과거의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빈곤을 몰아내는 데 더 근본 목표를 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높은 이념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극히 일상생활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혁명이 지향하는 데 대하여 국민대중은 쉽사리 그 호흡을 맞추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것, 극히 경험적인 것에 대하여 당장에 적응하는 데도 약간의 고통을 호소하는 자가 없지 않다. 강패소탕·쌀을 매점·매석하는 자의 엄벌·통행금지위반자의 처벌의 강화·공무원의 직무 여행(勵行)·학생들의 학문에의 전심·풍기단속의 강화·잡곡사용의 엄단·교통단속의 철저화, 이런 현실이 혁명 후에 눈에 띄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강력한 요구는 군사혁명 당국의 포고문을 기다려서 비로소 가능한 따위의 성질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명제국의 법 체제에서 어디서나 요구되는 최소한의 행동원리의 제 일보에 속하는 따위의 것이다. 그러한 것이 잘 지켜져서 사회가 질서를 바로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위에 정치의 민주화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위 신문기사는 5·16 직후 군정에 의해 실시된 조치들을 “어떤 형이상

27) 「여적」, 『경향신문』, 1961년 5월 22일자.

학적인 높은 이념의 세계”가 아닌 “일상적인 것, 극히 경험적”인 차원의 것임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문명제국의 법 체제에서 어디서나 요구되는 최소한의 행동원리의 제 일보에 속하는 따위의 것”들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따라서 ‘국민’대중이라면 이 5·16 군정의 조치에 “쉽사리 그 호흡을 맞추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가 부가된다. “군사혁명 당국의 포고문을 기다려서 비로소 가능한 따위의 성질”이 아닌 ‘국민’대중이라면 누구나 실행 가능하다는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이다. 하지만 ‘국민’대중이라면 누구나 실행 가능하고 실행해야 할 이 조치들에 대해, “당장에 적응하는 데도 약간의 고통을 호소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국민’대중의 자격됨에 미달되고 있다는 명확한 표시가 된다. “일반적으로 문명제국의 법 체제에서 어디서나 요구되는 최소한의 행동원리의 제 일보”도 견지 못하는 비(非)문명인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위 신문기사는 5·16 군정에 의해 행해진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 선풍을 일상적인 미시정치의 차원에서 ‘국민’대중이라면 스스로가 비(非)문명인이 아니라는 ‘피단속자’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한다. 즉 피단속자=국민대중의 등식을 위 신문기사는 5·16 군정을 ‘대신’하여 설파하고 있는 셈이었다.

피단속자=국민대중의 등식은 “『다사제제(多士濟濟)』를 흉내내던 전직 장관·정계 요인·재계 거물·관계(官界) 상층부들의 면면”이 “이정재·임화수·유지광 등의 깡패족속들은 오히려 문세 밖”²⁸⁾으로 만든다는 한국사회의 지배층에 대한 4·19의 분노의 예봉을 비뚤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4·19 이후에 쏟아져 나온 각종 거리의 데모나 시위는 “데모로 동트고 데모로 해가 지는 것”²⁹⁾ 같다는 데모 만능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야기했지만, 이것이 5·16 군정에 의한 피단속자=국민대중의 등식으로 치환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전도나 역전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4·19 이후 민심과 민생 및 민중에 대한 유례없는 재발견과 평가는 데모와 데

28)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5월 20일자.

29) 『휴지통』, 『동아일보』, 1960년 10월 10일자.

모반대의 데모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데모만능사태를 빚어냈지만, 이를 ‘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지배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도 사실이다.³⁰⁾ 민주당의 장면정권이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으로 이 데모만능사태를 저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격렬한 반대시위에 막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4·19의 민권과 민생에 대한 유례없는 관심과 자각에서 기인한다. 데모 만능은 민권의 과도 분출이라는 측면에서 절제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단속과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4·19의 혁명적 분위기가 이러한 이대 악법으로 규정된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의 제정을 가로막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깡패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부패와 타락상이 “『줄을 댄 깡패』”들을 양산시킨 “그 줄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공통된 인식의 발로였다. “그 줄의 위에 있는 사람이 법치주의의 정신만 잘 체득”하여 “공평하게 『법률 앞에 평등』하게만 취급”한다면 “자연히 이 땅에 자유의 꽃은 피게 되고 동시에 고질이 되어 있던 『줄』도 자취를 감”추게 되리라는 발언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줄을 댄 깡패』”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병폐와 해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고칠 수 없는 고질은 아”³¹⁾니라는 이와 같은 인식은 4·19의 위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개혁 의지와 열망을 단적으로 예증한다. 말하자면 문제는 정치깡패와 같은 꼭두각시 수족들이 아니라 이들을 사주하여 한국사회를 깡패공화국의 오명을 덧씌우게 한 몸통, 즉 지배층에 있다는 인식의 발로였던 셈이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갖은 부정부패와 특혜로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나아가 한국사회를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덧씌우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청산과 정화의 대상자가 되어

30) 4·19혁명을 통해서 민생, 민중, 민권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었다. 사월혁명에는 “그러한 여론을 민중들의 집합행동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는 자각성”을 보여준 “국민혁명”이라는 점에서 “진정 우리는 하나의 혁명을 치루었다는 감회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는 고영복, 『혁명 후 사회동태의 의미』, 『사상계』, 1961년 4월, 86쪽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31) 황산덕, 앞의 글, 157쪽.

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처벌과 청산 욕구가 이른바 4·19의 데모만능사태의 한 원인이었음을 떠올려본다면, 자숙과 처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명확해진다.³²⁾

그러나 5·16 군정은 강패소탕을 빌미로 한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의 선포 속에서, 자숙과 처벌의 당사자를 이 구악의 지배층만이 아닌 “바로 그 따위 모든 사회악을 제 2의 천성”³³⁾으로 갖게 된 국민 일반으로 되돌리는 변이와 굴절 및 단층을 보여주게 된다. 공산·용공사범과 짝을 이뤄 가장 핫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강패소탕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악의 뿌리 깊은 폐해와 독성을 ‘증거’하는 살아 있는 신체가 되어 푸코가 이야기한 일종의 신체형인 광장의 처벌에 처해졌던 것이다. 살아 있는 사회악의 증거로서 일종의 신체형인 광장의 처벌에 처해진 강패들은 4·19를 맞아 터져 나왔던 지배층과 결탁된 폭두각시 수족들만이 아닌, 박정희가 즐겨 쓰곤 한 한국사회의 누천년의 악습과 폐해가 만들어낸 국민성(민족성)의 일부로서 정위되고 재구축되어진 것이다. 4·19를 이어 등장한 5·16 군정의 이러한 역전된 인식은 강패소탕에 내재된 폭력성의 징후를 짙게 드리웠다. 이 내재된 폭력성의 기미를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포착했던 사람이 바로 함석헌이었다. 그는 박정희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로서 그에 의해 피살되기까지 한 장준하가 5·16 직후 군정에 대해 일정한 기대감을 표시했던 것과 달리, “4·19 이후 침으로 조금 열었던 입을 또 막아? 언론자유 주니 남북협상소리 나오더라고 성급한 소리 말”³⁴⁾라고 5·16

32) 4·19와 그 이후 이어지는 데모의 특색은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파급되어 확산일로로 걷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19가 지닌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층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4·19를 전후한 이러한 움직임은 “반혁명세력의 몰지각한 행동을 규탄하는 국민의 분노는 마산·안성·창녕·삼천포·함안 등지에서 요원의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21일 아침에는 서울 시내에서도 드디어 폭발”하여 부정선거 원흉이 뻔뻔하게도 옥중 출마를 감행한 데 대한 “옥중출마자를 규탄”하는 데모로 확산되었음을 전하는 『서울서도 드디어 쫓기기』, 『경향신문』, 1960년 7월 21일자 그것이다.

33)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1년 5월 22일자.

군정을 향해 갈파하게 된다. 그는 “우선 좀 강패 없고 썩어진 관리꼴 아니 보고, 찻간 좀 조용하니 좋다좋다 하”지만, 그것이 실은 “감격은 없고 두려움만이, 의견은 발표할 용기가 없고 그저 가만있음만이 있”게 되는 공포정치의 시작일 수 있음을 알렸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우선 좀 강패 없고 썩어진 관리꼴 아니 보고 찻간 좀 조용하니 좋다좋다 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회 안정을 위해 더 큰 화를 불러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사람이 다 성인은 아닌 이상 민중이란 더구나 무지하고 타락된 것인 이상 어느 정도의 강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하여 “피스톨 하나로 민족개조를 하”겠다는 발상은 그에 의하면 4·19를 맞아 겨우 입을 떼기 시작한 이 민중들의 입에 다시 재갈을 물리는 일이었다. 그가 “누가 하는 혁명인가?”라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손에 칼을 들고”서 “입에 굴레를 씌”운 군인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하는” 민중의 혁명임을 주창했을 때, 이는 동시기에 나온 국가재건최고회의 명의의 『지도자도』와 그 평행선을 달리게 했다. 팜플릿 형태의 이 소책자는 제목에서 암시되듯이 지도자의 도를 다룬 것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지도자의 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5·16 군정의 이러한 전도된 관점과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도』가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의 「지도자의 성격」 및 뒤따르는 3장을 「피지도자의 분석」으로 실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3장의 「피지도자의 분석」에서 “인구 전체의 비례로 볼 때 정도의 차는 있으나 대부분은 강력한 타율에 지배받던 습성이 제 2천성으로 변하여 자각, 자율, 책임감은 극도로 위축”³⁴⁾되어 한국의 “모든 사회가 도적의 소굴이 되고 무질서와 혼란이 지배”(29)하게 되었다는 언급은 이를 제거하고 정화하기 위한 인간 개조와 수술의(手術醫)로서의 지도자를 요청하는 배경이 된다. 이어지는 4장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여기서 “을

34) 함석헌, 「5·16을 어떻게 볼까?」, 『사상계』, 1961년 7월, 39쪽.

35) 박정희, 『지도자도』,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16쪽.

이 일단 병들어 갑(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를 상징한 신체 비유를 동반한 수술의=지도자의 논법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진다.

‘병든’ 환자를 ‘치료’할 책임과 사명감을 지닌 의사(수술의)가 “건강 회복을 위하여 신체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수술까지도 강요”하며 때로 “부분적으로 볼 때 건강 법칙에 위배되는 듯한 신체 일부분의 절단까지도 단행”해야 되듯이, 지도자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사(수술의)=지도자의 논법이다. 물론 “환자의 고통을 동정하여 회봉대(灰繃帶)를 시기상조하게 제거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영구히 병신으로 만드는 감정”(26)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것이 의사(수술의)의 고독한 결단에 맞먹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의사(수술의)와 환자라는 인간 생명의 경각을 다루는 의학 담론이 지도자와 피지도자라고 하는 통치 관계에 적용되어 푸코가 말한 전형적인 생명/권력의 양상을 띠게 되는 이 장면에서, 함석헌이 발했던 경고는 그래서 예사롭게만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 전도된 상황을 일러 “칼 든 의사”가 “병인에게 할 말은 그저 믿고 참으라는 것뿐”이며 그래서 환자는 “죽기 각오하고 참아야” 되는 일방적인 폭력 행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깡패소탕이 의미하는 5·16 군정의 이러한 일방적인 폭력 행사의 위험성은 피단속자=국민대중의 등식과 병행하며 한국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국면에 몰아넣고 있음을 함석헌의 이 발언은 상기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속죄와 참회는 규율장치 일반에 속한다. 아감벤은 이를 “속죄장치에서는 새로운 나가 옛날의 나의 부정과 수용을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이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속죄장치에 의해 조작된 주체의 분열은 새로운 주체를 생산하는 것이며 그 새로운 주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가 깊은 나의 ‘비’진리 속에서 자신의 진리를 찾아”내는 부정성 속에서의 자기 긍정성의 계기를 내포하게 된다고 말한다. 아감벤의 속죄장치는 깡패의 집단적인 참회행렬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무엇보다 자기를 부정하는 부정성의 계기로 읽히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부정성은 속죄장치가 의미하는 바 그대로 부정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부정성에 따르는 탈주체화는 반드시 자기 긍정성의 주체화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때에야 비로소 속죄장치는 효과적인 국민화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강패들의 집단적인 참회행렬에 이은 5·16 군정의 또 다른 국가적 이벤트로 행해졌던 ‘국토개발근로대’는 주목을 요한다. 5·16 군정에 의해 체포·구금된 강패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 ‘국토개발근로대’는 집단적인 거리행진에서 약속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대열에 대거 동원되고 차출되었다. 피단속자의 대표표상으로 일종의 신체형인 광장의 처벌에 처해졌던 강패들은 또다시 5·16 군정이 내건 인간 개조 프로젝트를 ‘과시’하기 위한 타깃이 되어 ‘국토개발근로대’에 대거 동원 및 차출된 셈이었다. 이 ‘국토개발근로대’는 임화수의 심복 부하로 4·19의 정치강패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소 기각으로 풀려났던 박호가 그 대장이 되어 이끌었다. 그를 대장으로 한 ‘국토개발근로대’는 5·16 군정에 의해 A·B·C 세 등급으로 나뉜 강패들 중 주로 B급 강패들로 구성되었다. 이정재·임화수·유지광 등 핵심(거물) 강패들은 A급으로 군재(軍裁)에 회부된 반면 송사리강패로 간주된 C급은 훈계 방면되고, “신흥강패나 A급에 포함되지 않는 기소 중지자”로 이루어진 B급 강패가 5·16 군정의 인간 개조와 국가 재건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어 이전의 자기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자기로의 거듭남이라는 국가 이벤트의 충실한 배우역을 떠맡은 셈이었다.³⁶⁾

강패들의 집단적인 거리행렬이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며 실시간으로

36) B급 강패에는 정치강패뿐만 아니라 일반 강패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법외지대라는 말로 정치강패를 포함한 강패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눈다. “정치강패, 건달족, 똥만이, 조무래기, 뜨내기”가 그것이다. 이 중 정치강패는 전술했듯이 우익청년과 연관되어 정치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면, 유흥가와 상가를 돌아다니며 세력권 다툼을 벌인 건달과 소위 C급에 해당되는 조무래기, 뜨네기가 존재했다. 이 중에서 국토건설근로대의 주 구성원을 이룬 B급 강패는 정치강패 중 핵심(거물)이 아닌 자들과 건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었다.

전해졌듯이, 이들의 활약상 역시 신문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어주었다. 르포와 현지 취재 기사로 일반에게 전해진 이 ‘국토개발근로대’의 활약상은 박호가 쓴 『이색부대 120일간』이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가장 상세하게 드러난다. 1961년 10월 19일에서부터 26일 동안 『경향신문』에 총 5회에 걸쳐 연재된 박호의 이 수기는 식민지 말기 근로보국을 위해 동원된 주체들이 자기 고투 겸 자기 증명을 위해 쓴 참회의 기록과 흡사하다. 박호는 이 『이색부대 120일간』이라는 수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 처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애썼는지를 알리고자 분투한다. 즉 자신들의 힘든 노동현실과 그럼에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증명의 기술이 『이색부대 120일간』을 관통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자기 참회와 개조의 기록은 5·16 군정의 신체통치술과 맞물려 향후 그 방향성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시사적이었다.

태백산 국토개발근로대의 구성분자는 13세로부터 49세까지였다. 여자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다. 이들의 학력을 보면 대학졸업자가 45명, 중·고졸이 48명, 중·고·대학 재학생이 약 30명 그리고 무학자 3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교 이상 출신이니 문맹은 거의 없다. 위관(尉官)급 제대장교 5명을 비롯하여 육해공군 각 병과출신이 백여명, 특히 조국을 위해 싸운 영예의 상이용사도 12명이었다. 직업별은 교원·공무원을 비롯하여 각종 회사원·이발·목공·석공·도안사·조리사·운전사 기타 갖가지 기술자이다. 그런가 하면 『양아치』 『백정』까지 끼어있는 다채로운(?) 『멤버』들이었다.....처음 근처 주민들은 우리를 가리켜 “서울 쟁패부대”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근로태도와 질서를 보고 공사의 진전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자 동네사람들의 눈초리는 달라졌다. 마을사람들과 우리들은 친해졌다. 정이 오고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쟁패』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나에게 “재건국민운동태백산지구특별촉진회회장”의 자리를 맡긴 것이었으리라. 제멋대로 닥치는 대로 살았던 친구들이 오늘은

그 억센 힘으로 땅을 파고 큰 돌을 번쩍 추켜들어 축대를 쌓아올린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척척 저 할 일을 하니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다. 그것은 인간이 개조되어가는 마음의 변화였다.....떠나올 때는 때 묻은 옷, 찢어진 옷, 냄새나는 옷들을 입고 왔는데 이제 돌아가는 우리들은 단정한 근로복을 빨아입고 희망과 행복을 찾아간다.³⁷⁾

고질적인 사회악의 주범으로 공산·용공분자와 함께 일차적인 척결 대상이 된 강패들은 ‘국토개발근로대’라는 열악한 도로건설현장에 그야말로 내던져졌다. 강원도 오지 태백산의 이 힘겨운 노동현실은 그럼에도 이들의 굴하지 않는 활약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시’되고 ‘상연’되었다. 이들은 연령과 직업 및 학력에서 어느 일반인과 다르지 않았다. 13세에서부터 49세까지 직업도 교원과 공무원을 비롯하여 운전사까지 망라되어 있었고, 학력의 면에서 이들은 오히려 한국사회의 평균치를 상회할 정도였다. 이처럼 다양한 인적 구성과 이력의 ‘국토개발근로대’는 처음에는 자신들을 ‘서울강패부대’라고 부르며 멀리했던 마을사람들까지도 이들의 성실한 근로 자세와 태도에 감명을 받아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음을 위의 수기는 생생한 실감을 담아 국민들에게 전해주게 된다.

위의 수기에 묘사된 이들의 달라지는 의식과 생활상은 그 자체로 이전의 죄를 뉘우치는 반성과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근로/생산주체를 동시에 매개한다. 강패들의 집단적인 거리행진에서 선보였던 5·16 군정의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오지의 도로건설현장에서 비로소 그 구체적인 실현을 본 셈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전시’하는 근로/생산주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이들이 현실에 복귀할 것임을 말해주는 일종의 연극 무대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5·16 군정은 이들의 ‘전시’된 신체를 통해서 5·16 군정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국민화

37) 박호, 『이색부대 120일간』, 『동아일보』, 1961년 10월 19일-10월 31일자. 위의 본문에서 제시된 인용문은 10월 19일과 20일 그리고 31일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일부분만 선택하여 인용했음을 밝혀 둔다.

의 형상을 근로/생산주체에 맞추어갔으며, 이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제어되지 않은 신체를 규율·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로/생산 현장에 집단적으로 동원되고 차출된 이 강패들의 신체는 이런 점에서 5·16 군정의 주권권력을 현시하는 한편으로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더 정확히 말하면 ‘위임’해서만 자신의 신체의 힘(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국가의 명령과 요구를 신체에 깊숙이 각인하는 신체 통치술의 대상이 되어 ‘국토개발근로대’를 들지었던 셈이었다.

근로/생산주체라는 5·16 군정에 의해 일종의 정언명제로까지 화한 바람직한 국민화의 형상은 이처럼 강패소탕에 이은 국토개발근로대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이클은 한국사회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강패를 여공과 더불어 자기 초상으로 갖게 되는 이유였다. 강패로 표상되는 제어되지 않은 신체는 5·16 군정에 의해 ‘남비’로 규정되어 처벌과 정화의 대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생산주체는 바람직한 국민화의 이상으로 한국사회의 여공 신화를 견인하게 된다. 국가가 명령하고 요구하지 않는 신체의 힘(능력)을 최소화하는 국가의 신체 통치술이 이른바 ‘내핍’이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되어 젠더‘화’의 함의를 강하게 띠어갔던 것인데, 이는 처벌해야 할 신체와 바람직한 신체를 나누는 국민화의 경계선으로 작용했다. 즉 5·16 군정에 의한 바람직한 국민화의 문법이 단순히 일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극도로 억제된 이 ‘내핍’의 유순하고 복종적인 여성화된 신체로 모아졌다는 말이다.

4·19를 잇는 5·16 군정과 그 뒤를 잇는 제 3공화국의 박정희정권은 이 내핍의 젠더 자질을 십분 활용하며 바람직한 국민화의 형상을 여공에다 맞추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젠더 분업이 국가의 신체 통치술로 전유되었으며, 한국사회의 여공 신화와 접목되어졌다. 이 여공 신화는 한국사회의 압축(고도)성장을 이끈 수출역군으로 여공들의 신체를 간주하는 것과 동계에서 1964-5년의 치열한 한일협정의 대치와 갈등의 국면에서 강패 논란을 재연시키게끔 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젠더 정치를 가동하게 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에는 여공 신화가 만들어지는 한국사회의 변모 과정이 되짚어질 것이며, 이 여공 신화를 추동한 바람직한 국민화의 형상이 경제 주체이지만 ‘탈’정치의 주체로서 정위되는 과정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3장의 주된 논점이 되는 것은 내핍과 여공 신화 및 1964-5년의 한일협정의 국면에서 재연된 깡패 논란이다.

3. ‘내핍’의 젠더 정치와 여공 신화의 창출

5·16 군정에 의해 이루어진 제어되지 않은 신체에 대한 비판은 규율된 신체를 국가 통치술의 일부로 하는 과정과 등가적이다.³⁸⁾ 이들의 제어되지 않는 신체성은 국가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규율된 신체를 일탈하고 교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명령하고 지시하지 않는 이러한 일탈과 과잉의 신체성은 5·16 군정이 표방한 사회질서 확립과 구축의 타깃이 되어 처벌과 정화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더불어 국가만이 오직 이 적절하지 않는 신체들을 올바르게 규율하고 인도할 수 있다는 국가권력의 독점과 현시가 5·16 군정의 군인/가부장의 형상 속에서, 바람직한 국민화의 방향을 (선)결정했다. 이런 점에서 5·16 군정에 의한 ‘낭비’의 당대적 의미망은 중요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산업화 초기 낭비는 척결되어야 할 대표적인 부정적 자질이였다. 반면에 부르주아계급의 미덕으로

38) 깡패들의 ‘국토개발근로대’는 감옥행에 준하는 신체 규율과 통제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를테면 “6개 중대로 편성되어 분대장에서 소대장·중대장을 임명하고 본 부중대에는 행정·작전·보급·취사·의무·연락·목공·이발 등의 부서가 있고 헌병 CIC 역할을 겸무하는 감찰대가 대대장 직속으로 독립되어 있는 조직 체계와 “참모회의의 결의로써 탈선자를 엄벌하기 위해 참회실(懺悔室=營倉)을 마련하여 반성의 고통을 주는” 공간 구성은 이러한 ‘국토개발근로대’의 감옥에 준하는 신체 통제와 훈육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신체 통제와 감시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로 표현될 만큼 충분히 강압적인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일 개월이 지나 대원들의 생활은 익숙”해졌다는 진술에서,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과시하고 있었다.

상찬된 검소는 계층의 위계적 특권화를 보장하며 전 국민적인 보편규범으로 재구축되어진다. 부르주아의 미덕이자 전 국민적인 보편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검소는 낭비를 안티테제로 하여 계층과 성별 및 지역과 연령의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규범으로 통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진테제와 안티테제를 구성한 검소/근면과 낭비/사치의 계열화는 곧 사회통합과 분열의 상징이 되어 자본주의의 전 역사적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했음은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대목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검소와 낭비가 강조되고 요구되는 특정한 역사적·지역적 조건과 상황일 터였다. 진테제와 안티테제를 구성하며 규범과 반규범의 대표자질로 정위된 검소와 낭비는 소위 저개발(후진)국가들의 발전도상에서 이를 재차용하는 지역적 현실을 매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검소와 낭비가 지닌 개념적 역사성에 대한 주의의 환기와 더불어 이를 둘러싸고 전개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좀더 세밀한 시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규율(훈육)은 한편으로 신체를 ‘소질’, ‘능력’으로 만들고 그 힘을 증대시키려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와 그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력을 역전시켜 그것들을 엄한 복종관계로 만든다. 규율(훈육)에 의한 강제력은 증가되는 소질과 확대되는 지배 사이의 구속관계를 신체를 통해 확립해두는 것”³⁹⁾이라는 푸코의 지적은 정확히 이 지점을 가로지른다.

그는 규율(훈육)이라는 국가의 신체 통치술은 신체의 힘(능력)의 서로 다른 분배와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신체의 힘(능력)의 적정 분배와 사용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대별되는데, 이를테면 경제적 측면에서 신체의 힘(능력)의 증대는 효율성의 증대로 여겨진 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힘(능력)을 감소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국가의 신체 통치술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중 효력이 그가 말한 자기 자신의 예속화에 해당된다. 5·16 군정은 이러한 신체의

39)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217쪽.

힘(능력)의 이중 효력과 조음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바람직한 신체를 재조정해 나갔다. 이는 강패소탕을 즈음하여 제창된 재건국민운동으로 재확인된다. 1961년 6월 12일에 발족한 재건국민운동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5·16 군정의 혁명공약 제4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 국민운동으로 출범했으며, 여기서 4·19의 빈곤 탈피에 내재되어 있었던 급진적 사회변혁의 전망과 기획은 후퇴되고 오로지 ‘내핍’이라고 하는 지극히 여성화된 자질만이 강조되는 변화된 국면을 뚜렷이 노정시키게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목표인 민주과업을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사월혁명에 이어 오월혁명이라는 비상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민족의 불행입니다. 우리들은 지나치게 의타적이었으며 무책임하였으며 이기적이었으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으며 자유의 이름 밑에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며 동지와 적을 식별하지 못하여 공산역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조차 국민들 사이에는 있었던 것입니다.....우리는 어떠한 곤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정신헌명을 단행함으로써 모처럼 이루어진 혁명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침투해 있는 누습과 타성을 일소하고 자발적이고도 청신한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국가 백년의 기초를 굳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애국의 길이요 구국의 길입니다.....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실천·이행하여야 할 당면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호소하는 바입니다.

(一) 우리는 용공주의를 배격함으로써 국기를 견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一) 우리는 부화방종을 버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一) 우리는 내핍 생활을 여행(勵行)하여 검소한 습성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一) 우리는 앞장서서 근면정신을 양양 발휘하여 국민개로(國民皆勞)를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一) 우리는 생산의욕을 증진함으로써 나라를 부강케 하여야 하겠습니다.
 (一) 우리는 국민도의를 정화하여 화목한 사회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一) 우리는 정서관념을 순화하여 밝고 명랑

한 생활환경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一) 우리는 국민체육을 권장하여 강인한 체위와 건전한 정신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⁴⁰⁾

위 예문은 재건국민운동의 취지와 과제를 담은 부분이다. 재건국민운동의 발족을 맞아 초대회장으로 위촉된 유진오는 위 예문에서 드러나듯이, 총 8가지의 당면 과제를 제시한다. 그 중에서 근면과 생산의욕의 증진은 푸코가 말한 신체의 힘(능력)의 증강에 해당된다면, “검소한 습성”을 기르기 위한 행동규범으로 제창된 내핍은 신체의 힘(능력)의 감소에 속한다. 내핍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물자가 없는 것을 참고 견”디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극도의 부재와 결핍을 의미하는 내핍은 불필요한 신체의 힘(능력)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국가 개입과 통제의 양상을 드러낸다. 내핍이 지닌 검소와 낭비의 이 달라지는 의미 지형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절약과 자제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바의 것이었다. 이는 내핍에 함축된 극도의 한계상황에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내핍의 특수한 의미망으로 인해 낭비 또한 그 의미 변화가 불가피했다.

내핍을 둘러싼 검소와 낭비의 이 달라지는 의미 지형은 4·19와 5·16을 거치는 이행의 국면에서 각별한 중요성을 띠게 된다. 왜냐하면 전술했듯이 4·19를 맞아 터져 나왔던 각종 요구와 불만들은 ‘빈곤’ 탈피를 우선 과제로 한 급진적인 정치 참여와 투쟁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⁴¹⁾ 이를테면 빈곤 탈피를 매개로 한 남북통일(협상)론과 각종 노동 관련 시위와 쟁의들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는

40) 『정신혁명으로 재건에 매진』, 『경향신문』, 1961년 6월 12일자.

41) 빈곤 테제는 급진적인 사회변혁의 전망과 기획을 투사하며 한국전쟁 이후 금기시 되어오던 남북통일(협상)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빈곤은 드물긴 하지만 쿠바혁명으로 표상되는 후진제국들의 연대와 공감의 세계 이해를 새롭게 정초해내기도 했는데, 이는 ‘빈곤의 지리지’라고 부를 만한 급진적인 세계 좌표의 이동이었다. 빈곤이 지닌 이러한 급진적 면모는 기존의 동서 냉전을 대신해 남/북의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탈냉전의 시대 흐름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4·19와 5·16, 빈곤의 정치학과 리더십의 재의미화』, 『서강인문논총』, 2013을 참조할 수 있다.

것을 자신의 혁명공약으로 한 5·16 군정과 그 기반을 공유했지만, 5·16 군정은 이 빈곤 탈피를 남북통일(협상)론과 노동조건향상의 향상이 아닌 오직 ‘내핍’이라는 근로/생산주체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자연히 내핍이 함유하는 국가 통제와 개입은 4·19의 각종 요구와 불만을 불필요한 신체의 힘(능력)의 사용으로 규정하는 ‘낭비’로서 배척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하야한 4월 26일을 기점으로 한 시위와 데모는 생활상의 긴급한 요구와 불만들로 이어지며 더욱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각종 노동 관련 시위와 쟁의들이었다. 이 노동 관련 시위와 쟁의들은 이른바 데모만능사태의 한 주범으로 간주되며 신문지상의 중요 지면을 오르내렸는데, 『민족일보』의 「4·19 이후 쟁의만 2백13건」은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서 전하고 있다. “이십일일 보건사회부 노동국 통계에 의하면 4·19 이후 지난 18일(1961년 4월 18일)까지 전국 직장별 노조에서 야기된 쟁의 건수는 2백13건에 달한다. 이 중 일백5십9건이 해결을 보았고 5십4건이 미해결된 채”로 있었다.⁴²⁾ 그런데 이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으로 단체협약(87건)에 이어 노임인상(73건)과 미불노임청구(16건)가 해고반대(13건)와 노동조건이행(24건)을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만큼 이 시기에 폭증한 각종 노동 관련 시위와 쟁의들은 생존권 사수의 의지를 반영하며, 기존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격렬한 반응과 투쟁들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4·19의 각종 노동 관련 시위와 쟁의들은 대한노총의 어용적 성격에 반발해 1959년 8월에 결성된 전국노동자협의회가 오히려 4·19를 맞아 활성화되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기존논의에서 이 시기의 노동 관련 시위와 쟁의는 주로 교원노조에 방점이 가 있지만, 이 시기의 노동 관련 시위와 쟁의는 “운수업에서 방직업 및 부두자유노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포와 범위를 보여준다. 특히 부산피복과 삼호방직·제일모직·대한방

42) 「4·19 이후 쟁의만 2백13건」, 『민족일보』, 1961년 4월 22일자.

직(전 조선방직) 등의 여성노동자가 다수를 이루는 방직업계의 경우, 그 시위와 쟁의의 격렬성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27일 하오 2시경 대구시 칠곡동에 있는 대한방직공장에서 해고당한 남녀 30여 명이 몰려와서 「공로금 및 퇴직금」과 복직을 요구하는 데모가 일”어나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은 최루탄까지 발사해 가면서 하오 3시 45분경 겨우 해산을 시”⁴³⁾킨 사례가 그 하나이다. 대한방직 사태는 “152명가량의 현 조합원들의 폭력 방해를 받아 앞장섰던 퇴직 여직공 두 명이 곤봉과 발길에 채여 현장에서 쓰러”져 “김남순(46세) 김성일(29세)”⁴⁴⁾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상경을 불사하는 투쟁과 “엄동의 서울거리에서 짓밟이까지 업”고 사장의 집 앞에서 며칠째 “철야데모를 계속”하는 참상으로 한동안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무려 8년여를 끌어온 이 대한방직 사태는 “해당자 일인당 일만5천환의 해고위로금을 지불하는 협약”⁴⁵⁾을 맺고서야 비로소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다.

이처럼 미해결된 문제가 4·19를 맞아서 분출된 것은 비단 대한방직만의 경우는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기의 가장 유명한 노동쟁의로 기록되고 있는 제일모직 사태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152명에 대한 불법휴직조치 철회 및 불법폐업 중지와 정상작업 실시”를 요구 조건으로 단식 파업에 들어간 제일모직 노동자들은 공장 폐쇄를 철회하기로 했던 사측이 약속을 위반하고 공장 폐쇄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해 “5백여 구파노조원이 공장에 집결하여 신사협정 이행하라! 공장문을 열어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과 충돌하며 “쌍방이 수명씩의 부상자”⁴⁶⁾를 냈다. 제일모직 노동자들의 쟁의는 같은 처지에 있던 “「대한방직」, 「조운」, 「달성제사」, 「조선기업」 등의 각 노조원들이 “제일모직 노조에 합세할 목적으로 정문까지 육박”해 왔지만 경찰의 제

43) 「복직요구 데모 전 대한방직 직원들」, 『동아일보』, 1960년 5월 28일자.

44) 「유혈소동 대한방직 회사원과 전직사원들이 충돌」, 『동아일보』, 1960년 9월 6일자.

45) 「8년 전에 해고된 대한방직 여공들」, 『여공애사(女工哀史)』에 종장, 『경향신문』, 1960년 12월 8일자.

46) 「다시금 악화 제일모직 쟁의」, 『동아일보』, 1960년 7월 5일자.

지로 “문밖에서 연좌농성”⁴⁷⁾을 하는 등의 연대투쟁으로 한국노동사에 몇 가지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4·19를 맞이하여 분출된 이러한 각종 노동 관련 시위와 쟁의들은 대한방직과 제일모직 사태가 예증하듯이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미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요구에서부터 최저생활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 요구와 “외출하여 늦게 들어오는 여공,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직공, 사감에 반발하는 직공들을 수용하여 여러 가지 비인도적인 사형(私刑)”⁴⁸⁾을 관행처럼 되풀이해온 공장문화의 개선 요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조건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위의 사례는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이러한 열악한 노동 현실과 조건을 개선하려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는 5·16 발발과 함께 완전히 동면상태로 접어들고 만다. 5월 19일에 군정은 「경제회복에 관한 특별성명서」를 통해 “노임은 5월 15일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노동쟁의는 일체 금지”⁴⁹⁾하는 포고령 제 5호를 발효했다. 또한 5월 21일에는 “모든 정당사회단체는 4294년 5월 23일을 기하여 이를 해체”하는 포고령 제 6호를 공포하여 노동조합을 전부 해체했으며 8월 3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노총이 재결성될 때까지 국가 통제와 억압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5·16 군정의 2년간의 통치 동안 억눌렸던 불만과 비판들이 2·18, 2·27, 3·16성명의 이른바 번의에 번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미국의 개입까지 초래한 1963년의 해빙 무드인 대통령선거에서 불거질 것은 당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의 좌익 전력 못지않게 논란을 야기한 것이 바로 ‘내핍’이었기 때문이다.

5·16 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내핍’을 국가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한 박정희는 대통령선거 직전에 출간된 『국가와 혁명과 나』

47) 「헌병도 백여 명 출동 4개 노조서 응원 데모」, 『동아일보』, 1960년 7월 5일자.

48) 「사형(私刑)사실 판명 여공 수용실(收容室)에서 『제일모직』 분쟁」, 『동아일보』, 1960년 7월 8일자.

49) 「금융동결 곧 해제」, 『경향신문』, 1961년 5월 20일자.

를 통해서 이를 재'확인'한다. 반면 '내핍'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오로지 국민들을 향해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진영의 논리도 만만치 않는 것이었다. 이 반대 진영의 논리에 따르면, '내핍'은 5·16 군정의 지난 2년간 실정과 소위 구악을 대신한 신악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건국민운동을 통해서 '내핍'의 생활화를 주창해온 5·16 군정의 제반 억압과 통제 조치들은 이 반대 진영의 논리와 맞부딪히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5·16 군정은 세칭 4대 의혹 사건(증권파동·위커힐·새나라 자동차·빠징코)으로 대표되는 실정과 부패의 대명사로 반대 진영에 의해 호명되고 있었고, 이는 5·16 군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내핍'을 뜨거운 쟁점으로 화할 수밖에 없게 했다. 5·16 군정의 실정과 부패에 대한 첨예한 대치가 '내핍' 논란에 불을 지핀 형국이었다.

혁명에는 후퇴가 없다. 여기에 어찌 여·야가 있으며 찬·반의 시비가 있는 것인가.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최대한의 인내와 최고도의 피와 땀을 그리고 정열을 경주하는 곳에서만 보장되는 민족의 결실인 것이다.....그러나 요는 국민의 '마음가짐', 이것이 크게 결함되었다는 것을 아니 느끼는 사람이 있고, 부정할 사람이 있겠는가. 결심하고, 투지 있고, 향상하려는 몸부림이 일찍이 없었거니와 지금 회박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망이라 할 것이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소리를 노래로 듣고..... 이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밍더라.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 왔다.⁵⁰⁾

실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흔히 위정자들은 국민의 내핍생활을 강조하는 일이었다.....민생고에 시달려온 일반국민들에게는 해당하지도 않는 일

50)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1997, 270~275쪽.

이다. 이 이상 내뱉할 아무것도 없는 서민생활에 그러한 이야기는 당치도 않음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구호는 임금이나 월급을 더욱 억눌러 일 반급여소득자의 생활고를 가중하여도 불평을 하지 말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군사혁명 당시의 사태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로 말할 수 있다면 군정 2년 반(半) 만에 겪은 것은 무엇이었으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곤란은 무엇인가. 위정자는 무엇으로 이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추상적인 공약이나 정견발표판으로써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위정자들은 새 민정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고와 이에 반영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⁵¹⁾

위 두 예문은 ‘내뱉’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차를 재확인시켜준다. 첫 번째 예문에서 박정희는 4·19에 이은 5·16혁명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인내와 최고도의 피와 땀을 그리고 정열을 경주”할 것을 강조한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라!”(276)로 집약되는 이러한 전 국민적인 일치단결은 “돌아가는 기계소리를 노래로 듣”는 것과 대비되는 “고운 네 손”을 지닌 소녀를 부정적으로 환기하는 이유이다. “고운 네 손”을 지닌 소녀는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 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 왔”기 때문에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고운 네 손”을 지닌 소녀가 이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그녀가 5·16 군정이 제창한 신성한 노동을 하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소녀가 자신의 신체의 힘(능력)을 전혀 불필요한 데 쏟고 있어서이기도 했다.

“이등 객차에 앉아서 불란서 시집”이나 읽는 “고운 네 손”의 소녀가 지칭하는 것이 이것이다. 정형화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동반하는 이러한 “고운 네 손”을 지닌 소녀는 낭비와 사치 그리고 걸치레의 지성을 상기시키며, 신성한 노동에 복무하는 효율적인 신체와 대립된다. 낭비와 잉여의

51) 「위정자는 민생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향신문』, 1963년 12월 9일자.

신체에 다름 아닌 이 “고운 네 손”을 지닌 소녀의 형상은 따라서 첫 번째 예문에서 보여주듯 언제나 비국민의 혐의 속에서 배제되고 배척될 수 있는 것이었다. 내뺨을 둘러싼 검소와 낭비의 의미 지형은 익숙한 젠더 분리를 가동하면서 이루어졌음을 위의 첫 번째 예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예문에서 박정희는 국가가 명령하고 요구하는 신체의 힘(능력)의 적정 분배와 사용을 ‘내뺨’으로 결정화하며, 국가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이 ‘내뺨’을 끊임없이 활용하고 동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내뺨의 이러한 체제 동원과 내화는 그러나 두 번째 예문에 의해 제동이 걸린다. “내뺨할 아무것도 없는 서민생활에 그러한 이야기는 당치도 않”다는 지적이 바로 그러하다. “그와 같은 구호는 임금이나 월급을 더욱 억눌러 일반급여소득자의 생활고를 가중하여도 불평을 하지 말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서 5·16 군정의 지난 2년간 실정이 통렬하게 비판되고 있다. ‘내뺨’으로 봉쇄되고 억눌린 일반 국민들의 생활고(민생고)는 “더 이상 내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국민이 아닌 그 민생고의 타파를 부르짖었던 통치자 자신에게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점을 두 번째 예문은 강한 어조로서 꼬집는다. 누천년의 악습과 폐해의 담지자로 오직 국가에 의해 ‘개조’의 대상으로 전략한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고 극복할 것이 없다는 이 통렬한 비판 속에서, 내뺨은 아래가 아닌 위로 정조준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 내뺨을 둘러싼 이 갈등과 대치의 국면은 1964년 1월 『사상계』가 권두언으로 「내뺨은 위정자가 먼저」를 내걸었을 만큼, 내뺨은 1963년 대통령선거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사상계』는 이 권두언을 통해서 “확대된 모순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수단”으로 내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과거 2년 반의 군정기간에 정부는 배신의 상징이었고 부패의 화신”이었기 때문이다. 군정에 의해 초래된 한국사회의 위기와 모순은 “국민에게 허리띠를 조르며 견디자고 호소”하는 것으로 그 미봉책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상계』의 이러한 비판은 내뺨이 이른바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내뺨을

둘러싼 이 갈등과 대치의 국면은 5·16 군정을 뒤이은 박정희정권에 대한 깊은 불안의식을 내장한 채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되는데, 이는 1964-5년의 한일협정의 국면에서 재‘점화’된다. 내뺨은 『사상계』도 말했듯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하와 빈부를 떠나서”⁵²⁾ 누구나 한 대열에 서야 하는 전 국민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전가될 때 초래할 수 있는 독재의 위험성을 공공연하게 내포했기 때문이다.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불거진 이 ‘내뺨’ 논란은 3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한일협정의 국면에서 재‘전이’되었다. 한일협정은 한국사회에 잠재해 있었던 국가성장과 발전 및 민주주의의 향방과 관련하여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호 충돌을 빚어냈고, 이 과정에서 내뺨 논란이 한일협정으로 옮겨간 측면이 컸다.

1964년 6월 3일을 정점으로 하여 1965년 8월까지 이어진 이 한일협정의 대치 국면은 박정희정권에 의해 8월 25일 위수령을 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위수령을 발동하는 날, 박정희는 약 15분간에 걸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게 된다. 이 특별담화문은 5·16을 전후한 강패 논란과 내뺨 문제를 총‘정리’하는 일종의 축소판과 같았다. 이 특별담화문에서 박정희는 5·16 직후 강패소탕을 직접 언급하며, 청년학생들을 향해 이에 준하는 경고와 위협을 발하게 된다. 1965년 8월 25일의 이 특별담화문은 1965년 1월 1일의 연두교서에서 제창된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는

52) 『권두언』 내뺨은 위정자가 먼저, 『사상계』, 1964년 1월, 26쪽. 당시 일반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아래의 도표는 문형선, 『도시중산층의 파산』, 『사상계』, 1963년 8월, 89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도표에 따르면, 내뺨은 당위가 아닌 한국사회의 현실 그 자체였으며, 일반 서민들의 가계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항상적인 만성적자로 고통받고 있었다.

	1960	1961	1962
평균	-560	-710	-800
봉급생활자	-650	-750	-970
노동자	-430	-590	-570

<서울 봉급생활자 및 노동자들의 월평균 가계수지 적자>

수출지상주의와 겹쳐지며, 청년학생들을 향해 불필요한 데 신체의 힘(능력)을 쓰지 말 것을 경고했던 것이다. 이는 청년학생들을 깡패의 자리에 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깡패의 자리에 청년학생들을 놓음으로써 박정희는 그동안 세대교체의 당위성 속에서 비교적 온정적인 태도로 대해 왔던 기존의 태도를 완전히 전환시키게 된다. 청년학생들에게 되돌려진 박정희의 반감과 적의는 학생=깡패/용공의 의미 전이를 동시에 수반했다. 박정희는 청년학생들을 이와 같은 학생=깡패/용공의 연쇄 고리로 묶으면서 이들을 배타시하는 한편, '내뺏히는 근로/생산주체'를 최적의 신체로 하는 바람직한 국민화의 이상을 여공에서 찾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강화해 갔던 것이다.

공부하기 싫고 시험치기 싫어서 한일회담 반대를 핑계 삼아 선량한 학생까지 폭력으로 협박하여 거리로 끌고 나오는 이러한 무법과 폭력이 횡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불순학생들은 언필칭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고 학원의 자치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부조리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깡패정치에 항거하여 그것을 무찌른 학생들이 바로 그 깡패의 위치에 대신 들어서서 불법과 파괴를 일삼으로써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나 학교의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타 학교가 데모를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면 학교의 명예가 손상된다. 지난번에는 어느 학교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체면이 선다 운운하는 이 따위식 사고방식이 과연 지성인을 자부하는 학생들이 할 행동이라고 봅니까.....나는 대다수 학생, 대다수 정치인, 그리고 대다수 교직자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크게는 국가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이 일부 암적 존재를 뿌리뽑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현 정권의 운명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민주 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조국의 근대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정권의 평화적 교체라는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데모를 이 담화를 발표하는 이 시각부터는 철저히 단호히 단속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학생 데모로 인해 생산과 건설과 증산에 경주해야 할 우리 국력이 얼마나 헛되이 소모되고 있으며, 파괴된 공공기물과 일반 시민의 손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부상한 경찰의 수는 지난 3·24사태 이래 3,182명이나 됩니다. 또한 본의 아니면서도 불량 학생들에게 강제로 끌려나와서 부상한 학생수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지금 우리 학생들과 같은 세대의 일본 학생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실력을 닦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날마다 데모나 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공부는 언제 하고 실력은 언제 양성하는 것입니까.⁵³⁾

위의 예문은 박정희가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일단의 성명서에 속한다. 이 특별담화문에서 박정희는 “깡패정치에 항거하여 그것을 무찌른 학생들이 바로 그 깡패의 위치에 대신 들어서서 불법과 파괴를 일삼으로써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한 후, 청년학생(지식인)들을 5·16 전후의 깡패에다 유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깡패 논란의 재연은 5·16 직후에 행해진 깡패소탕의 퍼포먼스를 상기시키며, “대다수 학생, 대다수 정치인, 그리고 대다수 교직자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크게는 국가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이 일부 암적 존재를 뿌리뽑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엄포를 뒷받침했다. 깡패와 학생의 전치와 자리바꿈이 이러한 엄단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위 예문에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용공의 삼박자가 합쳐져 소위 학생=깡패/용공의 연쇄 고리를 만들어낸다. 박정희정권이 어째서 5·16 직후의 깡패소탕을 이 국면에서 재연하고자 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일협정의 참여한 대치와 충돌의 국면에서 불거진 이 깡패 논란은 깡패로 표상되는 소모적인 신체의 힘(능력)의 사용을 엄단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학생들을 탈정치의 주체로 정위하

53) 『박대통령특별담화요지』, 『경향신문』, 1965년 8월 26일자.

고자 하는 박정희정권의 의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과 건설과 증산”과 대비되는 이 “일부 암적 존재”의 낭비하는 신체들이 바로 데모하는 청년학생들의 부정적 신체 형상이었다. 이러한 낭비와 소모의 부정적인 신체 형상이 “일본 학생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실력을 닦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날마다 데모나 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공부는 언제 하고 실력은 언제 양성”하느냐는 국가 간 비교를 가동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청년학생들에 의해 대일굴욕외교로 비판받으며 전면적인 무효 투쟁으로 나아가게 했던 한일협정 체결의 장본인이 역으로 자신의 정책적 모순과 한계를 데모학생들에게로 되돌리는 형국이었다. 미국에 의해 주도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이 낳은 박정희정권의 한일협정 체결은 대외적 종속성을 오직 ‘우리’의 결함과 부족에서 찾는 박정희 식의 (신)식민주의적 사고와 결부되었음도 이 맥락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못나고 뒤쳐진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통해서라도 그 후진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른바 종속을 통한 자립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학생들은 이를 비판하기보다 그 굴욕을 되새기며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대외적 모순의 대내적 투사이자 반향이었던 것이다.

미래를 담보로 한 현재의 이 끝없는 희생과 인내의 통치 문법은 데모 학생들을 4·19의 혁명주체가 아니라 탈정치의 규율된 신체로 정위했다. 지금 너희들은 한갓 데모나 벌일 때가 아니라는 “생산과 건설과 증산”의 바람직한 국민신체가 이 낭비와 소모의 신체들로 낙인찍힌 데모학생들과 대비를 이루었다. 이는 당시를 풍미한 지성의 위기와도 상통한다. 박정희는 지나친 지성이 쓸데없는 곳에 신체의 힘(능력)을 분산시켜 낭비와 소모를 낳기 쉽다는 논리로 신성한 육체노동을 더 우선시하는 전도된 위계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부추기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도된 위계화는 저학력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세계 체제 내 하위 노동력을 담당할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상황의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이 세계 체제 내 하위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대행해줄 주체(agency)의 재생산은

곧 박정희정권에 의한 여공 신화를 창출케 했으며, 월러스틴이 말한 중심 부국가와 주변부국가의 부등가교환에 기초한 “소득을 공동 이용할 세대(가구)로서 프롤레타리아”⁵⁴⁾ 집단을 영속화하는 한국사회의 노동현실로 귀결되었다.

월러스틴은 임금소득으로 한 세대(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숫자는 중심부국가와 비교해 주변부국가에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임금소득으로 한 세대(가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는 임금소득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부국가는 부와 소득이 집중되는 중심부국가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와 자본을 보충하려 들었고, 자연히 임금소득은 일반적인 소비수준에 못 미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출처들이 총동원되는 것이 주변부국가의 특징적인 일면을 이룬다고 월러스틴은 지적한다. 가령 영세자영업과 부업 등의 가내서비스와 일용직노동 등의 단순노동형태가 이러한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충하는 세대(가구)소득의 필수 요건이 되는 셈이다. 월러스틴의 이러한 설명은 세대(가구)소득=임노동형태+단순노동형태를 주변부국가의 특징적인 노동현실로 삼게 한다.

월러스틴의 이러한 설명을 참조하면, 한일협정 체결은 한국사회가 이

54) Immanuel Wallerstein, “Marx and History: Fruitful and Unfruitful Emphases”,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 Verso, 1991, p. 130. 월러스틴은 세대(가구)는 가족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반드시 가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세계의 노동자는 소득을 공동 이용할 세대라는 소집단을 이루며 생활하게 되는데, 이 세대는 누군가의 임금소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중심부국가와 주변부국가간의 임금소득의 비율은 균등하지 않으며, 주변부국가일수록 이 임금소득 이외에 다른 원천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테면 소상공생산, 임대료(수입), 중여, 생존유지생산 등을 이 다양한 소득원천으로 꼽고 있다. 한국사회는 호주를 중심으로 흔히 한 가족이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를 가족과 등치하기 쉽지만, 한국의 넓은 친족관계를 고려하면 세대(가구)를 가족에 꼭 한정하기보다는 소집단으로 규정하는 그의 정의가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러한 주변부국가의 노동현실을 일상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박정희정권은 강패 논란의 재연을 통해서 “한일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덮어놓고 뭐라고 요즘에 바깥세상이 뒤숭숭하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좀 나서서 기분풀기 위해서 나가보자”는 식의 방탕한 집단 심리에 휩쓸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의 이러한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일협정이 갖는 종속적 노동현실을 국가정책의 기조로 삼는 바탕 위에서, 당시의 용어를 빌리자면 ‘매관’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청년학생들과 좁힐 수 없는 차이를 노정했다. 이는 또한 임노동자이지만 결코 임금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다수의 저임금·비숙련노동자를 한국사회의 주도적 근로자상으로 만드는 정책 기조의 발동이기도 했던 것이다.⁵⁵⁾ 내뱉을 활용한 박정희정권의 이러한 공세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아래의 도표에서 시사되듯이 저임금과 비숙련의 여성 노동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65년 『여성』지에 실린 「직업여성실태조사(통계발표를 중심으로)」에서도 재확인된다. 비교적 근무여건이 양호한 직업여성들(공무원·여공 포함)을 대상으로 임금소득을 전체 세대(가구)의 생계비와 비교한 아래의 조사통계표는 임노동자이지만 한 세대(가구)의 소비수준을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여성의 임금소득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한 세대(가구)의 가장인 남성의 ‘보조’노동력으로 여성 노동력을 규정하는 젠더 분업이 이러한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조건을 틀 짓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음도 물론이다.⁵⁶⁾

55) ‘매관’자본주의는 신식민주의와 연관해서 당시 청년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를 잡지의 주요 논조로 삼은 것이 1964년에 창간된 『청맥』이었다. 『청맥』은 한일협정의 국면에서 이 매관성의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하며, 박정희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이것이 통혁당 사건으로 이어지며 『청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청년학생들의 반대 움직임도 위축되어진다. 문제는 이 매관성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인식이 아직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며, 전태일의 분신은 이런 점에서 문제인식의 틀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56) 서신숙, 「직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자」, 『여성』, 1965년 3월, 10~11쪽. 위 본문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여성들 간의 임금 편차도 무시할 수 없는 부

직장별 분류	A	B	C	D	E	F	G	H	평균
가족수	5.9	6.5	4.7	5.4	6.4	5.5	5.6	6.0	5.8
생계비	4.800	7.200	7.500	6.200	6.900	5.600	7.300	6.300	6.457
봉급	1.500	3.400	4.400	3.900	2.900	4.500	2.600	3.700	

<세대(가구)수와 생계비 및 직업여성들의 월평균 임금소득 분포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후원을 얻어 산업별 노조의 꾸준한 협력 하에 각 공장을 접촉하면서 16개 산업별 노조 중 부녀부 조직이 되어 있는 14개 중 서울 중심 대상만의 9개 노조(전매, 섬유, 자동차, 화학, 체신, 출판, 연합, 금융, 금속)를 대상으로 선택”한 위 조사통계표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비교적 양호한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임금 수준은 최고 4,500에서 최소 1,500의 편차를 보인다. 하지만 위의 조사통계표는 공통적으로 여성의 임금소득이 한 세대(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했다. 이들의 임금소득은 실제 세대(가구)소득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었지만, 이 여성들의 부족한 임금소득이 상징하고 있듯이 다양한 소득출처들을 총동원해서 먹고살 수 있는 “종신(終身)적 프롤레타리아화”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노동현실과 조건을 이루었던 것이다. 박정희정권이 연신 ‘내핍’을 부르짖은 것도 이러한 세계 체제 내 하위 노동력의 대항자로서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조건을 미봉하기 위해서였음을 위의 사례는 시사한다. 1965년을 ‘일하는 해’로 선포하며, 베트남과병의 군사종속과 한일협정의 경제종속을 심화시켜간 박정희정권은 자신이 주장한 자립을 오로지 국민

분이다. 하지만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I』, 도서출판 한울, 2001, 92쪽은 여성의 임금소득이 남성들에 비해 보통 39.0~45.9%에 머물렀음을 말해준다. 또한 1968년 섬유업계의 숙련공과 비숙련의 경우 숙련공은 월평균 임금이 5,820원이었던 반해 여성 미숙련공은 2,875원 정도로 여전히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었다.

개개인의 ‘내핍’으로 해소하려는 대내적인 억압과 통제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자립과 민족주체성은 이 시기를 관통한 뜨거운 쟁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정권은 여러 대내적인 도전과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자립’이란 한일협정으로 상징되듯이 종속을 통한 자립에 다름 아니었고, 이는 자립이 아닌 일방적인 굴종으로 반대 진영에게는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청년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강행된 한일협정과 베트남파병은 이와 발맞추어 수출 역군의 여공 신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게 했다. 박정희정권의 여공 신화가 갖는 의미는 이러한 종속을 통한 자립이라는 이율배반과 모순을 고스란히 응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고도(압축)성장을 견인한 여공들의 신체 형상은 이러한 주변부국가의 하위 노동력의 충실한 대행자로서 저임금과 불평등을 견디는 것이었고, 박정희정권은 이를 바람직한 국민화의 이상으로 삼는 국가의 신체 통치술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공 신화에 담긴 여성의 주체화는 이 이율배반과 모순의 중층 결정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하위주체(즉 서벌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또 다시 신화화하는 일은 여성의 주체화에 담긴 이 이율배반과 모순을 은폐하고 누락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공 신화의 탄생과 전개 과정은 한국사회의 ‘내핍하는 근로/생산주체’라는 경제의 주체이지만 정치의 주체는 아니라는 국민화의 문법과 상응한다. ‘내핍하는 근로/생산주체’는 여공 신화의 버팀목이 되어 창녀와 식모에서 여공과 주부로 그 위상이 옮겨간 한국사회의 여성성의 재편과, 깡패에서 국토건설근로대와 베트남파병인력으로 이동해간 남성성의 재편을 서로 마주보게 한다. 4·19와 5·16의 변모하는 사회상을 매개하는 깡패와 여공의 이 두 가지 표상은 한국사회의 고도(압축)성장에 가려진 명암을 되비추며, 1970년의 서두를 열 전태일의 분신을 잉태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4. 순치되는 혁명, 한국사회에서 깡패와 여공은 무엇이었나-결론을 대신하며

1964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는 「경찰의 학원 난입·사법부 난입은 반국가적인 반역행위」라는 기사에서 “서울대 법대생 3백여 명은 교정에 모여 「법의 존엄 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우리 법학도는 사법권의 독립과 존엄을 총칼로 짓밟는 군부 「깡패」들의 행위를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법의 수호에 총궐기”하겠다고 선언서를 발표했음을 전한다. 여기서 서울대 법대생들은 몇 가지 사항을 언명했는데, “사법부의 독립과 존엄을 짓밟는 무장정치「깡패」의 명단과 배후를 공개”할 것과 “우리 대학의 지성은 민족적 양심과 자유민주주의의 교두보로서 이후의 사태 진전을 주시하겠으며 만약의 경우 행동도 불사”⁵⁷⁾하겠다고는 불퇴전의 의사였다. 서울대 법대생들의 이 선언서는 4·19를 촉발한 한국사회의 후진적인 깡패정치가 아직도 청산되고 있지 않음을 박정희정권을 향해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집권세력인 군인들이 오히려 이 깡패정치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꼬집는 것이었다. 1964년 한일협정의 국면에서 터져 나온 이 깡패 논란은 1965년 박정희가 청년학생들을 향해 깡패정치의 혐의를 덧씌웠던 것과 역상을 이룬다. 누가 누구를 깡패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청산과 정화의 대상은 이처럼 통치자 자신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4·19의 주역이었던 청년학생들이 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정세였다.

깡패 논란은 한국사회의 제 일의적인 과제였던 부정부패와 특권계급의 청산을 아우르며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그 공통된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4·19의 정치깡패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비판과 청산의 요구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주시기를 바라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였다. 4·19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5·16을 정당화했던 군정은 깡패소탕의 대대적인 국가 이벤트로 이를 전

57) 「경찰의 학원 난입·사법부 난입은 반국가적인 반역행위」, 『동아일보』, 1964년 5월 23일자.

유하고 독점해갔다. 그런데 1964-5년의 한일협정의 국면에서 이 쟁패 논란이 재연되며 쟁패정치의 진정한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첨예한 대립각을 빚어냈던 것이다. 박정희가 한일협정 타결을 즈음하여 청년학생들을 향해 5·16 직후의 쟁패소탕에 준하는 공격성을 드러냈던 것도 박정희정권을 향한 쟁패정치의 혐의를 청년학생들에게로 되돌리는 일종의 반격이었다. 1964-5년의 반복되는 계엄령과 위수령의 발동은 이 청년학생들을 쟁패/용공의 낭비하는 신체로 규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적대와 반감으로 청년학생들을 순응하는 국민적 신체로 만들고자 했다. 이 와중에 인혁당과 통혁당 사건과 같은 공안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했다.

이와 궤를 같이 한 것이 극도의 한계 상황을 견디는 ‘내핍하는 근로/생산주체’의 양산이었다. 이의 중심에 기록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세계 체제 내 하위노동력을 담당할 여공들이 존재했다. 이 여공들은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며, 지성 운운으로 쓸데없는 곳에 신체의 힘(능력)을 낭비하는 청년학생들의 부정적 신체와 상반되는 지점에서 박정희정권에 의해 수출 역군으로 상찬되었다. 하지만 이 국가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추앙된 여공들의 바람직한 신체란 곧 착취와 억압의 산물에 지나지 않았음을 1970년의 서두를 연 전태일의 분신은 보여주었다. 조안 스콧의 말처럼 젠더를 경유한 정치적·경제적 모순은 “여성의 경제적 빈곤화가 남성들에게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70년의 시작과 함께 전태일이 박정희정권에 의해 추앙된 그 신체를 불태웠던 것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과 고발에 다름없었다. 박정희정권이 주장한 ‘내핍하는 근로/생산주체’는 그에 의하면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고삐에 매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⁵⁸⁾한 인간 이하의 삶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전태일의 불타는 신체는 이와 연관해서 그 무엇보다 박정희정권의 심부를 건드리는 징후적 사건이 될 수 있었다. 그

58) 조영래, 『전태일 평전』, 전태일 재단, 2009, 212~213쪽.

의 분신은 ‘내핍하는 근로/생산주체’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이었는지를, 더불어 우리의 “어린 누이들의 피와 땀”을 대가로 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응변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예로서의 삶이 아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쳤던 전태일은 ‘내핍하는 근로/생산주체’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다름 아닌 빈곤”이라며, 이 “빈곤을 두고서 반공과 승공”⁵⁹⁾을 할 수 없다는 박정희정권의 빈곤의 포비아(phobia)는 이로써 위기와 파탄에 처한다. 빈곤의 포비아는 4·19의 빈곤 탈피에 내재된 급진적인 사회변혁의 전망과 기획을 지우고 오로지 ‘내핍하는 근로/생산주체’라는 국민화의 문법으로 박정희정권의 억압적 통제와 감시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빈곤의 포비아가 지닌 이러한 내핍의 국민‘상’은 그 당사자인 노동자들에 의해 점차 거부되어짐으로써 그 이탈과 반란의 조짐을 본격화했다. 전태일의 분신이 갖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강패와 여공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19를 이은 5·16의 변모하는 사회상은 한국사회의 공적 무대에 강패와 여공을 무엇보다 문제적인 신체들로 부상시켰다. 한국사회가 보여준 강패와 여공의 이 특수한 삶의 양상들은 한국사회의 고도(압축)성장의 배후에 놓인 우리의 자화상을 근본적으로 되짚게 한다. 그것은 세계체제 내 하위 노동력과 군사력을 담당하며 이를 바람직한 국민화의 표본으로 삼았던 박정희정권이 4·19를 어떤 식으로 굴절·전치하며 강패와 여공의 특정 형상과 신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역사적 내력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먼 길을 우회하여 다시 묻게 되는 질문도 이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강패와 여공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현재의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자성을 담은 질문 말이다.

59) 박정희, 『자유의 날에 즈음한 담화문』,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대통령비서실, 1966, 44쪽.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강패생활 청산하겠다” 이정재(李丁載) 선두로 2백 명이 시가행렬』, 『조선일보』, 1961년 5월 22일자.
- 『관철동 시대 70년대 한국 문단 풍속화』, 『동아일보』, 1986년 8월 30일자.
- 『금속회수에 이채-반도의용정신대의 놀라운 활동』, 『매일신보』, 1944년 6월 13일자.
- 『명패를 붙이고 속죄 행진하는 강패 두목들』, 『동아일보』, 1961년 5월 23일자.
- 『보행위반 단속 3700여 명』, 『경향신문』, 1961년 6월 1일자.
- 『4·19 이후 쟁의만 2백33건』, 『민족일보』, 1961년 4월 22일자.
- 『서글픈 얼룩들-4.19 부산물 유행어 4년사』, 『경향신문』, 1964년 4월 18일자.
- 『서울서도 드디어 쫓기』, 『경향신문』, 1960년 7월 21일자.
- 『60년대 신어』, 『동아일보』, 1969년 12월 20일자.
- 『여론조사와 정부시책』, 『경향신문』, 1961년 6월 15일자.
-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시민의 협력』, 『경향신문』, 1961년 6월 1일자.
- 『여적』, 『경향신문』, 1961년 5월 22일자.
- 『정부시책지지가 압도적』, 『동아일보』, 1961년 6월 14일자.
- 『정신혁명으로 재건에 매진』, 『경향신문』, 1961년 6월 12일자.
- 『치안국장 발표 용공분자 2014명을 검거』, 『경향신문』, 1961년 5월 22일자.
- 『혁명 십일 간의 단속 실적』, 『경향신문』, 1961년 5월 27일자.
- 『혁명 축행(逐行)상 필요시 법원 영장 없이 체포·구금』, 『동아일보』, 1961년 5월 18일자.
-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0년 5월 20일자.
- 『휴지통』, 『동아일보』, 1960년 10월 10일자.
- 고영복, 『혁명 후 사회동태의 의미』, 『사상계』, 1961년 4월, 86쪽.
- 김두환, 『피로 물들인 건국전야-김두환 회고기』, 연우출판사, 1963, 87~93쪽.
- 김용순, 『혁명치적의 총결산: 내무위원회 소관』, 『최고회의보』, 1963년 12월, 24쪽.

박계주, 『여수』, 『동아일보』, 1961년 11월 17일자.

박정희, 『지도자도』,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16쪽.

_____,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1997, 270~275쪽.

박호, 『이색부대 120일간』, 『동아일보』, 1961년 10월 19일-10월 31일자.

서신숙, 『직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자』, 『여성』, 1965년 3월, 10~11쪽.

이돈영, 『그 거창한 분기여』, 『사상계』, 1960년 6월, 290쪽.

유지광, 『대명』, 동서문화사, 1974, 353쪽.

함석헌, 『5·16을 어떻게 볼까?』, 『사상계』, 1961년 7월, 39쪽.

황산덕, 『강패시대』, 『사상계』, 1958년 6월, 108쪽.

_____, 『한국강패의 사회심리적 분석』, 『사상계』, 1960년 3월, 156쪽.

그 외 신문 자료.

2. 단행본 및 논문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6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2004, 14쪽.

공임순, 『4·19와 5·16, 빈곤의 정치학과 리더십의 재의미화』, 『서강인문
논총』, 2013, 159~204쪽.

신순애, 『열세 살 여공의 삶』, 한겨레출판, 2014, 108쪽.

6·3동지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92~148쪽.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171~
205쪽.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I』, 도서출판 한울, 2001, 92쪽.

조영래, 『전태일 평전』, 전태일 재단, 2009, 212~213쪽.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217쪽.

Immanuel Wallerstein, “Marx and History: Fruitful and Unfruitful Emphases”, Etienne Balibar,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 Verso, 1991, p. 130.

조르조 아감벤, 김항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78쪽.

Abstract

Phobia of poverty, the revolution which becomes acclimation and gender division of the gang and yeogong

Kong, Imsoon

Chapter 1 of this paper noted the performance of gang sweeps took place shortly after 5·16. The performance which more than 200 gang went around the city of Seoul helped to establish the base of rule in 5·16 military government. The performance of a gang sweep by 5·16 the military government resulted in the image of people being regulated that returned to the demand for the national general crackdown on political thug of Syngman Rhee regime in 4·19. Chapter 2 made an issue of being inverted perspectives and perceptions having people being regulated=nation and examined how to work a usual physical governmentality of the country in process. Chapter 3 critically examined the yeogong myth of Korea, “work/production subject to austerity” charged social implications of gender. Chapter 4 described shape of society to transform based two problematic bodies called the gang and yeogong leading to 4·19 and 5·16. Also this section would ask again what the hell was the gang and yeogong in Korea and this current society of Korea how far away from it.

Key words : 4 · 19 and 5 · 16, Gang sweep, yeogong myth, public opinion poll, people being regulated=nation, austerity, work/production subject, the Korea-Japan Treaty, young student, Cheon Tae-II, Ham Seok-Heon, Park Chung-Hee, phobia of poverty, grammar of the nation-making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